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홍국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8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 의 자: 홍국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길영,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민병주, 박춘선, 서상열,
심미경, 유만희, 윤기섭,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규호,
최민규, 황철규 의원(26
명)

1. 주문

-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9건의 반도체 지원 법안과 AI 산업 지원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 위원회 설치, R&D 세액공제 확대, 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연구인 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기술패권 경쟁의 치열함을 인식하여 성장동력을 저해 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 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2022년부터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9건의 반도체 지원법안이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 고 대만이 AI·반도체 호황으로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하는 등 국가 경쟁력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 또한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 · AI 분야를 중심으로 전면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지연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반도체특별법과 AI 산업 지원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첨단기술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와 규제 개혁 및 국가적 지원을 촉구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4. 이송처

- 국회,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 서울특별시의회는 전 세계가 AI시대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와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함을 절감하고 있다.
- 대통령이 반도체특별법 통과와 AI산업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발의된 반도체 지원법안 9건이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AI 분야를 중심으로 전면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엄중한 시점에서, 정쟁에 매몰된 입법 지연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
- 특히 글로벌 경제 패권이 반도체와 AI 기술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대만에게조차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첨단기술력 확보를 통한 경쟁우위 선점만이 현재의 대외경제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AI시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 시급함을 절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9건의 반도체 지원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R&D 세액공제 확대, 연구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는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확대,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 정책 등을 포함한 AI 산업 지원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와 국회는 대외경제환경의 급변과 기술패권 경쟁의 치열함을 직시하여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2025. 10.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